

# 지역주택조합 정보 공개 갈등...소극 행정에 조합원 피해

### 불투명한 운영에 조합원들 불만...주월동·담양 등 고소·고발 잇따라 비대위, 법제처 해석 받고 행정심판 승소했지만 공개 늦어지며 피해 "당사자 해결 문제" 손 놓은 지자체...광산구는 선제적 명부 공개 눈길

광주·전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공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명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A씨가 광주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합에서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조합원은 관할 구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은 주택법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진행중인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갈등이 생겼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지난 2021년 11월 조합측에 '2020년 4월에 열린 조합총회의 현장참석자 명단'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비대위는 결국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 "해당 조합을 주택법 제12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구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해당 명부는 개인정보가 포

함돼있어 주택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비대위는 법제처에 주택법 제12조 해석을 요구하고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처는 "총회 의결자료, 참석자-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 등은 공개 대상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합원들은 이처럼 정보공개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된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관리·감독을 하는 남구가 정보공개만 제때 해줬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1년여만에 공개된 조합총회 참석자 명부에 표시된 지문을 전문기관에 감정한 결과 한 사람이 동일한 지문으로 찍었다는 감정서를 받았는데, 조합장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다"며 "조합장 관련 비리도 현재 송치된 상태로, 남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수십억 피해를 막

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조합원들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합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비공개 통보'라도 했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담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담양읍 삼다리에 추진 중인 '담양지역주택조합 대립 e편한세상'에서도 정보 공개를 두고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담양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조합측에 '조합원명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거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해당 조합에서 갈등이 심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조합측에 두차례 공문을 보냈다"며 "담양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제3자인 조합측에서 거부해 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조

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남구의 소극행정과 비교된다.

지난해 2월 '소촌라인1차 지역주택조합(가)'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이 계속 나오자 조합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서로 연락처를 모르고, 조합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광산구는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를 열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에 따라 조합원들이 서로 연락을 위해 총회를 열었고, 지난해 10월께 사업 종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을 요구한 광주 자치구 지주택 담당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명부는 공개해야 되는 사안이다"며 "조합측은 조합원들이 명부 비대위 등을 꾸릴 것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시민, 현대산업개발 상대 정신적 손배 패소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연이은 대형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광주시민 10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측의 손을 들어 줬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A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발생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난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각 31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 사유로 연속으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이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지만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시민들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가 광주시민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생들 "튀르키예에 지진 아픔 나눠요" 15일 화순군 화순읍 화순제일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문앞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아이들을 위해 성금모금 활동을 벌이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교도관 5명에게 폭행 당했다" 목포교도소 출소자 고소장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성이 복역 당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부안경찰에 따르면 목포교도소를 출소한 A씨가 '복역 당시 교도관 5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5월 교도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목포교도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노조 20곳 중 17곳 재정 보고 이행 광주고용청, 미제출 노조 과태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 노조 20곳 중 재정에 관한 보고를 이행한 노조는 1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20개(민간 12개, 공무원·교원 8개)를 대상으로 결산 재정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3개의 노조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

## 중고거래 현장서 고가 물건 날치기한 사촌형제

### 영암경찰, 2명 붙잡아

중고거래를 하면서 현장에서 고가의 물건을 날치기 한 2대 동갑내기 사촌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과 지난달 25일 영암군 삼호읍

거리에서 중고거래장터 '당근마켓'의 판매자로부터 총 900만원 상당 순금 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 출신인 이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촌 지간으로 중고거래 시 물품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 보이면 낚아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인 1조로 한 명은 인근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

다가 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촌을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대구와 청주에서도 귀금속과 고가의 휴대전화를 같은 수법으로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